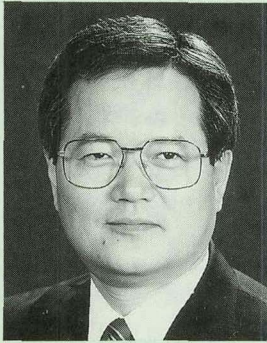


건강한 21세기를

- 국민건강증진사업의



鄭 義 和
국회의원

세

계보건기구(WHO)가 21세기를 '정치적 건강 과학시대(Political Health Science Era)'로 규정할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증진시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은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세계적인 추세에 쫓아, 지난 1995년 국민건강증진법이라는 훌륭한 법을 만들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추진할 조직과 재원의 부족으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은 국민건강권 추구라는 당위성에서나, 질병의 예방을 통해 얻어지는 경제적 측면의 효과에서도 그 어떤 사업보다 우선되어야 한다. 이런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은 약 132억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는 국민 1인당 297원에 불과하다. 이 금액은 최근 미국의 담배회사가 담배로 인한 피해보상과 의료지원 명목으로 지원하기로 한 연간 13조원의 금액, 즉 미국국민 1인당 10만원에 비교하면 1/330에 해당하는 액수이다. 이 정도 규모의 재원으로 어떤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가 앞선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을 위한 대폭적인 기금 확충이 필요하며, 확충방안으로 담배사업자의 공익자금 출연금(갑당 2원) 인상과 주류사업자에 대한 분담금 출연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건강증진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충분한 기금뿐만 아니라 정부내 전담기구, 건강증진사업의 성과를 점검하고 새로운 프로젝트를 개발할 연구기관, 민간협회의 구성, 그리고 학계와의 긴밀한 결합이 필요하다. 현재 건강증진에 관한 정책과 사업을 관장하는 중앙조직으로는 보건복지부 보건정책과가 있고, 지방의 시·도나 일선 시·군·구의

맞기 위하여

활착을 위한 제언 -

보건소에는 전담 조직이 없어 기존의 조직과 요원에게 국민건강증진 사업을 부가하여 맡기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건강증진사업중 보건교육에 관한 것 이외의 관련되는 쟁점에 대한 연구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은 어느 연구기관에 뚜렷하게 맡겨져 있지 않은 상태이다.

현행 보건정책과를 건강증진과로 개편·강화하여 국민건강증진에 관한 기획과 조정, 흡연과 건강, 음주와 건강, 영양 및 식이와 건강, 사회운동의 지원과 건강, 건강정보처리에 관한 사항으로 사업영역을 보다 구체화하고 각 사항을 담당하는 계(係)를 설치하고 각 계에는 해당사업의 개발과 계획, 보건교육, 평가를 전담하는 직원을 둘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건강증진사업과 관련된 기구들을 효율성에 입각하여 확대 강화하고 필요하다면 신설하여 건강증진계획에 관한 연구와 정책개발을 담당토록 하여 일선 관계요원에 대한 훈련과 사업의 평가를 전담케 해야 한다. 그리고 순수 민간단체로 국민건강증진협회를 결성하게 하여 민간운동을 전담케 하며, 학계로 하여금 연구원과 협회를 통하여 연구와 평가에 적극적으로 참여토록 유도해야 한다.

국민건강증진사업의 성공을 위한 또 다른 요소로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일관성 있는 전략 추진이 필요하다. 지난 시기 경제개발 5개년 계획처럼 앞으로 일정 기간까지 우리나라 국민의 건강을 어느 수준까지 높이겠다는 영역별, 항목별 구체적 계획의 제시가 필요한 것이다. 사업의 우선 순위를 정하고, 필요한 재원을 할당하며, 사업성과의 평가를 통해 다음 계획설정의 준거를 잡아 나가야 한다. 국회에서, 정부에서, 그리고 민간과 연구기관에서 국민건강증진사업에 관한 발상의 전환을 이뤄내고, 건강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노력으로 건강한 21세기를 맞도록 하자. 